2020
통권 제28호

EJONG CITY COUNCIL

+ 입법정보

세종의회소식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16

전국 기초의회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목소리 15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희망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17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 제66회 정례회 개회사 】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 의회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어느덧 입동을 지나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겨울은 추위보다 더 매서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심상치 않은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따라 중앙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방역 대책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66회 제2차 정례회가 3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종 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총예산은 각각 1조 8천여억원과 8,200여억원에 달합니다.
세종시의회는 2030년 도시완성단계로 향하는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 본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 규모 등을 세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가 등 어려움이 더 큰 지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세심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복지 정책 방향의 큰 틀 안에서 출산과 보육,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사업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 산업 육성,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도시 자족 기능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읍·면지역 인프라 확충은 물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형 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 개발과 업 클러스터 형성에도 가용한 재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예산액 대비 사업 효율이 적정한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론 조성과 국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어제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공동 선언문 채택에 이어 이번 공동 선언문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염원이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의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제 특정 도시와 광역권역을 넘어 전 국토를 아우르는 국민적 열망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여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올 한해 시민들과 함께 일한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5일간 이어지는 회기 동안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체계 역시 느슨해지지 않도록 상시 점검 태세를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태 환**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8호

4 **의정포커스**
정례회 성과
제66회 정례회

8 **의원 인터뷰**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12 **의정뉴스**
언론브리핑 온라인 중계 시스템 구축 외

16 **의회·의원소식**
이태환 의장 결핵협회 성금 기탁 외

27 **5분 자유발언**

34 **시정질문**

39 **신년사**
이태환 의장 신년사

40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 연구모임

53 주요안건 처리현황

57 제66회 정례회 주요 안건 통계

58 입법정보
생활법령정보
주요입법동향
법령해석사례
최근 시행 법령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개정 법규

78 논평 및 입장문

81 독자 글

FOCUS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중 성과는?

균형발전 위한 노력이 결실로 국회 세종시대 한층 가까워졌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와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국회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결의에 국회가 화답

지난 12월 2일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공식화한 결정이어서 향후 국회 이전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이 내년에만 100억원 이상 증액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월 10일 전국 기초 단위 지방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또 한 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국적인 열망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예산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세종시대는 한층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회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대표적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

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며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32년 만의 법률 개정'지방자치 새 시대'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쓰였다. 바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에 독립된 인사권이 부여돼 삼권 분립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30여년 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었다' 고 평가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는 다짐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해 나가겠다" 며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의회와 소통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는 의지를 내비쳤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소외 계층 예산 중점 심사

세종시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세종시와 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 본예산은 세종시 1조 8,173억원과 교육청 8,208억원 규모다. 세종시의회는 소관 부서별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다. 손현옥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종합 심사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폈다" 면서 "본예산 편성 방향이 시청 및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고 밝혔다.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친 세종시의회는 제66회 정례회 회기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미래 산업 육성 지원책,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다.

세종시의회, 올해 의정 평가에서 수상 잇따라

올 한해 의정 성과에 힘입어 의정 평가 결과 수상 실적도 잇따랐다. 지난 11월 '2020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친환경 부문' 에서 광역의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재현 의원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0 우수의정대상' 을 수상한 박성수·손인수 의원, '2020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을 받은 차성호·이윤희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한 상병헌 의원과 이윤희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이태환 의장은 같은 상 좋은조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이태환 의장은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을 추가로 받았으며 손현옥 의원은 한국청소년재단 주관 '청소년희망대상' 을 수상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0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손인수 의원(맨 좌측)과 홍정희 운영지원담당(왼쪽 두 번째), 박성수 의원(맨 우측)

*'2020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받은 차성호 의원(맨 좌측)과 이윤희 의원(맨 우측)

*'2020 전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친환경 부문'에서 광역의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재현 의원(왼쪽)

FOCUS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폐회 … 2021년 본예산 등 회기 중 76개 안건 처리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끝으로 2020년 마지막 회기 종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월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본예산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하고 2020년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금택·이윤희·이재현·차성호·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데 이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5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세종시와 시교육청 예산은 예년에 비해 각각 2,122억원과 329억원 증액된 1조 8,173억원과 8,20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 필요한 정책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와 사람, 미래를 연결하는 깨어 있는 정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 이라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 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친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 태세 상시 점검과 함께 새해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0 우수의정대상' 을 수상한 박성수·손인수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2020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을 수상한 차성호·이윤희 의원과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으로 선정된 이재현 의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 시정 연설을 하는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

* 시정 연설을 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청 1조 8,879억원 교육청 8,519억원 규모 제2회 추경 통과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회 오전 10시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 규모 세밀히 살필 것"

세종시의회는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세종시 류순현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시정 연설이 진행됐다.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과 지원 규모 등을 세밀히 살피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어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며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여론 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5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의원 인터뷰 /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회 만들겠다"

김 원 식 의회운영위원장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새해에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에 더욱 충실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입법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재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3대 세종시의회 운영 전반에서 의회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만났다.

Q. 의회운영위원장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인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시민들에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의회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중점 사항은 무엇인지?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정책을 심의하려면 의원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직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모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유하여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함께 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주요 현안을 꼽아본다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발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 뜨겁습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종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은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인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기능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그 계획이 실현될 때 명품 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은 광역과 기초가 함께 이루어지는 단층구조로 계획과 집행이 하나로 뭉쳐있어 자칫 집행 분야에 행정이 치우지는 경향이 있어 계획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아직도 눈에 보이는 집행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Q.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2014년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직하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쌓은 많은 경험과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Q.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의회는 시민이 있어야 존재하며, 의회가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인터뷰 /

시민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를 꿈꾸다

유 철 규 행정복지위원장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철규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치에 입문했다. 유 의원은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어떤 일이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기에 목표를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의원' 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Q. 취임 소감은?

행정복지위원회는 대변인,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등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 청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고유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좀 더 가까워져 매우 기쁘면서 동시에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잘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의회 청사진은?

후반기에는 전반기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평의원님들께서 새로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따뜻한 마음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시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은 것처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의원이 되어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경청하여 시민을 위한 세종시,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전반기 추진 성과와 아쉬운 점은?

저는 지난 2년 동안 세종시 행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형식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데 힘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직제에서 '총무과' 라는 용어를 '운영지원과' 로 바꾸어 권위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을 지원부서로서 직원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전자시스템에 등재토록 조치하였으며, 제출문서의 목록을 완비하여

나중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속 행정을 구현하는 등 행정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종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기능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그 계획이 실현될 때 명품 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은 광역과 기초가 함께 이루어지는 단층구조로 계획과 집행이 하나로 뭉쳐있어 자칫 집행 분야에 행정이 치우지는 경향이 있어 계획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아직도 눈에 보이는 집행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를 실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Q.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는 세종시가 오는 2030년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민들께서 주말이 되면 놀 거리, 볼거리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기보다 우리 세종시로 인근 도시에서 많은 스포츠 마니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이용도 편리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연구모임에서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당면 문제인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Q.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은?

중용(中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之道也), 성지자 인지도야(誠之者 人之道也)'. "성실이 하늘의 도리요, 성실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라는 뜻인데, 저는 조금 변형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얻을 수 있으니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삶에 참 맛이 있다." 라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자 굳이 말하자면 정치철학입니다.

Q. 세종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동친화도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을 지향하는 명품 도시가 되기를 이춘희 시장님부터 모든 시민들께서 희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란 겉으로 보이는 시설이나 환경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잘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식' 도 반드시 함께 성장하는 등 입고 있는 옷만 멋진 것이 아니라 몸에 알맞아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고풍스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를 지역일꾼으로 뽑아주신 세종시민들께서는 세종시의 성장과 함께 진정한 명품 시민으로 지역발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민들께서 주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시민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WS

세종시 의회는 지금

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 온라인 중계 시스템 구축

언론과 원활한 소통 위해 온-오프라인 언론 정례 브리핑 환경 조성

세종시의회는 매 회기 전 진행되는 언론 브리핑의 참여도와 정보 전달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언론 브리핑 장소로 활용되는 의회청사 대회의실에 온라인 중계용 빌트인(built-in)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온라인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과 시험 운용을 마쳤다.

특히 온라인 중계 시스템 구축 이후 처음으로 1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 언론 브리핑이 세종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비접촉 회의나 행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 소통 환경 조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며 "향후 온-오프라인 언론 브리핑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언론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열린 의회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제3회 언론 브리핑 주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처리 안건 브리핑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11월 9일 오후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회 언론브리핑을 갖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73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20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9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7건 등이 접수됐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과 '세종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조례안' 등 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세종시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

세종시의회는 10월 29일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공무원 신분 및 공직윤리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의회 김혁 입법정책팀장 ▲제윤의정 윤진훈 연구소장 ▲세종시의회 권영윤 사무처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고유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나아가 의정 홍보기법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면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복지정책 관련 현안 청취

9개 세종시 사회복지 단체와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12월 17일 대회의실에서 9개 세종시 사회복지 단체와 함께 복지정책와 관련된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김부유 회장)·장애인단체연합회(길현명 회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남명수 회장)·세종시노숙인시설협회(이형주 회장) 등 지역 내 9개 사회복지 단체장 및 회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이영세 의원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분야별 일자리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등 세종시 사회복지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의회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목소리

세종시의회 의정실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동선언문' 채택 온-오프라인 언론 정례 브리핑 환경 조성

세종시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1월 1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각각 충북과 대전, 충남과 전북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협의체인 시 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 단위의 지방의회와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광역, 기초)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조속히 처리 촉구

세종시의회는 11월 25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철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대폭 반영 ▲이전 규모와 시기가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결정

제6차 임시회서 세종시의회가 제안한 사무실 소재 이전 합의…
2021년 11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 예정

세종시의회는 11월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도 1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로써 전국 광역시 도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대한결핵협회에 성금 기탁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전달 받아…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1월 17일 의장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남상현 회장)에 성금을 기탁하고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 받았다.

이날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한결핵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부 남상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태환 의장은 "국내 결핵 환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도 결핵 퇴치 운동에 동참하셔서 '결핵 없는 사회' 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모금활동을 위해 '펭수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씰' 을 판매 중이며, 모금액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결핵 검진과 결핵 환자 지원 사업 등에 쓰일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희망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시청 광장서 사랑의 온도탑 불 밝혀…"힘든 시기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2월 1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에 참석해 나눔 운동의 열기를 상징하는 사랑의 온도탑에 불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태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본예산 심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월 31일까지 총 기부액 10억 7천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펼친다.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청소년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통과 등에 기여한 공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이 한국청소년재단 주관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을 수상했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14세에서 24세 청소년 1,000명이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한 손현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정책 활성화 연구모임' 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왔다.

특히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는 그동안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토대로 올해 청소년희망대상 후보에 손현옥 의원을 추천했다.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취소되면서 센터 관계자와 학생들이 손현옥 의원실을 방문해 상패를 대신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주민소환제로 시민주권자치 실현해야

의회청사 대회의실서 주민소환제 관련 세미나 열어 제도 활용 논의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6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용희 의원,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성선제 미국변호사(고려대 초빙교수), 김영래 행정사(라온행정사 대표행정사), 이성용 회장(세종균형발전행정수도이전시민연합)을 비롯해 주민소환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영래 행정사와 이성용 회장은 최근 선출직 지방 공직자가 본분을 잃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해이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제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며 "주민 스스로 나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용희 의원은 "주민소환제가 2007년 도입 이후 제대로 정착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는 소감을 밝히고 "주민소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주민소환제도가 올바른 시민주권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새롬고 독도동아리 방문

교내 독도전시관서 독도 교육 현황 파악하고 동아리 활동 격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월 4일 새롬고등학교를 방문해 교내 독도전시관 관람에 이어, 독도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만났다.

이순열 의원은 독도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동아리 활동을 묵묵히 해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 이라면서 "이번 제6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독도 교육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도 방문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날 독도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독도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독도 방문 재개와 학교 차원에서 이뤄졌던 '독도 플래시몹' 체험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한편, 이 의원은 새롬고 교장 등 관계자와 만나 독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동물 보호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참석

세종시농업기술센터서 주민 갈등 해소 방안과 유기동물 보호 방법 논의

11월 4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주민 갈등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보호, 입양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등이 모여 유기동물 보호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전동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과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세종지사 방문해 상담 및 체험 및 문서 결재 등 업무수행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1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세종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일일 지사장 체험을 통해 공단의 역할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 의원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공단 현안 및 업무 보고, 지사 방문 고객과 상담, 체험 및 문서 결재, 직원들과 인사 등 일일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지사장 체험을 마무리했다.

일일 체험을 마친 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제안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됐다" 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위원' 선정

지역 주민들 삶의 터전을 건강히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할 것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이 '2020 전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친환경 부문' 에서 광역의회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심사를 주관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와 안전 등 환경 분야와 관련된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광역의회 의원 10명과 기초의원 15명을 '친환경 최우수의원' 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의원은 지난해 '농·축산업 선진화 연구모임' 을 구성하고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는 등 축산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와 폐농약용기류 수거 촉진을 위한 '폐농약병 마을별 정기 수거 서비스 실시' 등 정책 대안 제시에도 적극 앞장서왔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간담회 참석

세종시 청년 정책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월 5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위원들은 이순열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 분과 위원들 간 정기적인 간담회 마련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 ▲세종시 청년 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 방안 ▲행정동별 청년창업문화공간 등 특화된 지원 사업 마련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희망 업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선배와의 만남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험의 장을 많이 제공해야 될 시기" 라며 "다른 도시에서도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자연스럽게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용·일자리 분과 간담회 참석

"세종시 청년들이 한목소리 낸다면 시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할 것"강조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동)은 11월 9일 의회청사 의원실에서 세종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용 일자리 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위촉된 세종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용 일자리 분과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고용 일자리 분과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용 일자리 분과 위원들은 손인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세종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고용 일자리 분과 위원들 간 정기적인 간담회 마련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 ▲세종시 청년 네트워크 조직화 및 활성화 방안 ▲행정동별 공간 및 일자리 정보 공유 공간 특화된 지원 사업 마련 ▲청년들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30여년 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에 대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 이라면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 면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는 포부를 드러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수돗물 문화제 챌린지 활동 홍보

시청사 로비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 위한'수돗물 마시기'캠페인 벌여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12월 10일 시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린 '수돗물 문화제 챌린지' 활동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이윤희 부의장과 손인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착한 물, 수돗물 알리기' 라는 주제로 조성된 행사장에서 수돗물을 마시고 세종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 운동에 함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스티커 붙이기와 카드 섹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태환 의장은 "유럽에서는 수돗물 음용률이 9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수돗물 마시기가 보편화돼 있다" 며 "우리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마시기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종시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설립에 힘 모으겠다

최근 세종시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과 독립적인 지회 설립 필요성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2월 3일 의회 청사에서 세종시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과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경제인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세종시 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의 입장이다.

이날 협회 측은 "현재 세종시만 독립적인 지회 없이 세종충남지회에 속해 있는 상황이어서 세종시의 특수한 기업 환경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느낀다" 며 세종충남지회에서 세종지회를 분할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상 의원은 "세종시 여성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인으로서 한층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세종지회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고 화답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소외된 이웃 위해 기부 캠페인 동참

의장실서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성금 100만원씩 기탁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12월 15일 의장실에서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 각각 성금과 특별회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현재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총 기부액 10억 7천만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1 나눔캠페인' 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 역시 총 모금액 1억 440만원을 목표로 나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 이라며 "올 겨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착한 기부 운동' 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건물번호 시범사업 예산 확보

본회의서 관련 예산 통과, 보람동과 나성동 건물부터 시범 도입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12월 15일 건물 식별의 편의성과 세종시 상점가 특유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람동 5번 건물, 나성동 3번 건물' 형태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상가 건물번호 표시 사업이 세종시 보람동과 나성동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노종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천편일률적인 상가 외관으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가 건물 외벽에 건물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상가 번호를 부여하는 일은 도시 미관 정비와 상가 이용 활성화는 물론, 화재와 범죄 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다른 주요 상점가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시에 관광형 2층 버스 달린다

본회의서 세종시 관광 활성화 유도할 이동식 관광 안내소 도입·운영 예산 통과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12월 15일 세종시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고 읍 면 동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목적 관광형 2층 버스'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목적 시티투어 도입 및 운영'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 축제와 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형 2층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형 2층 버스는 2층이 개방돼 있는 구조로 서울시티투어버스처럼 도시를 구경하며 주요 관광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노종용 의원은 "관광형 2층 버스는 앞으로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브랜드와 명소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향후 세종시를 상징하는 특화된 마스코트로서 대외 홍보활동 등에도 홍보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시의회

2020 의정발전 유공자 비대면 시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읍면동 별로 시민 26명에게 감사패 전달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지역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을 취소하고 읍 면 동장이 유공자 26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한해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시민 26명에 대한 공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 면 동 지역 별로 수상 인원을 안배해 의정발전 유공자를 선정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 면 동사무소에 의정발전 유공자 감사패를 사전 배부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감사패 전달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은 "수상자를 비롯한 가족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 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민원콜센터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업무 과중했던 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 노력 결실 맺어
세종민원콜센터 직원 격려 방문 "세종시민 행복도 더욱 높여주길" 당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내년 본예산에 세종민원콜센터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최종 편성됨에 따라 12월 16일 세종민원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 직원들에게 "세종시민들의 목소리를 일선에서 듣는 직원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세종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세종시민의 행복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콜센터 인력 충원 예산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리자를 포함해 기존 10명에서 2명 늘어난 12명이 콜센터에 배치돼 증가세를 이어온 민원 상담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로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 선정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공약 이행, 조례 제정 활동 우수 사례를 매년 발굴해 알리고 있다.

이태환 의장은 지난 9월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대표 발의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장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청년농업인과 전문가, 시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면서 "지역의 청년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고향에 정착해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 하겠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부의장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학교 양치시설 운영 등으로 공약이행 분야 우수 선정

세종시의회 이윤희 부의장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윤희 부의장은 ▲로컬푸드 설립 추진 ▲괴화산 숲체험 공원 지원 ▲효율적인 세종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어린이도서관 설립 추진 등 높은 공약 이행률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세종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와 '세종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써왔다.

이 부의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해결은 물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과 현장 활동, 각종 상임위와 특별위, 연구모임 활동을 기반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하며 "다만, 최근 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역구인 소담 반곡동의 새샘교차로 일대 교통정체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시, 행복청, LH,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햇무리교 상습 교통체증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오가낭뜰 공원 생활체육시설·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등으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 선정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병헌 의원은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 ▲오가낭뜰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두루뜰공원 산책길 조성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열린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 ▲아름초-늘봄초간 상생터널 개통 추진 등 주요 공약사항 실현과 추진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름중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중투심사규칙의 개정을 통해 아름2중을 신설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상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실제 정책 반영과 예산 수립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

상 의원은 "공약은 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인 만큼 의원으로서 공약 이행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왔다" 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대한민국헌정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의회 부문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하는 헌정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10월 14일 진행됐다.

서 의장은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세종중앙공원 등 주요시설 관리 일원화 및 관광자원화 개발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중앙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 관리로 인한 재정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세종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연간 3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고 세종중앙공원 1,2단계 개장이 모두 완료되면 유지·관리비는 7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며 "매년 세종중앙공원과 호수공원 관리 비용만 100억원 이상 지출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지정 절차의 경우 국가도시공원은 국토교통부, 국가정원은 산림청으로 각각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달라" 며 "세종시의 미래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와 정책전담기구 정비해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 생활 균형의 문화 확산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현옥 의원은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 꼭 정착시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은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의 적극 홍보 및 참여로 워라밸 균형정책의 정착 및 문화 확산 ▲일 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 정비 ▲민간기업 차원에서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 생활 균형 인프라 확충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산과 내실화를 통한 노사문화 정립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퇴근 후 자기 계발과 문화·여가 활동 등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이밖에도 일자리 정책, 노사 협력 및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 이라고 역설했다.

/ 5분 자유발언 /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적극 추진해야"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해 달라" 고 강조했다.

유철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기준과 장소,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민원 유발도가 낮은 종목별 공존 순위를 고려해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스포츠 축구장과 야구장의 경우 향후 조명시설에 보조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다정동 저류지 축구장의 경우 테니스장으로 변경(단, 기존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은 대체 시설 마련) ▲가까운 거리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배치 및 운영방안 마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동과 면지역 자전거 이용 연계성 강화해야"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읍 면 지역을 아우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실제로 자전거 도로와 공영 자전거 대여소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따르면, 면 지역은 제외된 채 동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읍 면 동을 아우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려면 면 지역까지 포함한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끝으로 ▲2022년부터 반영되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동과 면 지역 간 자전거 이용 연계성 강화 ▲담당부서 인력 확충과 업무 세분화 ▲민관 협력 방안을 통한 시와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의 주체는 학교, 교육청은 지원 역할로 상생구조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종촌동)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 기술과 융합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이날 "교육청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위탁용역' 결과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의 신입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계획했지만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희망 학과 설문조사와 몇 차례 회의만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에 옮겨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 등 교육청 지원 체계 정립을 통한 상생구조 마련 ▲세종시 및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 추진 등 교직원과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출·퇴근길 교통 정체 심각성 깨닫고 하루빨리 대책 강구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주요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 출·퇴근길 교통체증 대책 준비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구 집중화와 도로 폭 협소에 따라 도심 곳곳에 출·퇴근길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계획한 목표 인구인 80만 도시가 구축되면 지금의 2배가 넘는 인구 유입으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도로는 '교통지옥' 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또는 교통원격제어시스템 운영 ▲대체 우회도로 확보 ▲출·퇴근 시간대 경찰 인력 배치와 차량우선 신호체계 적용 방안 등 교통관제 시스템 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 5분 자유발언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증으로 세금 낭비 막아야"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방지를 촉구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손현옥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유검사 업무와 관련된 예산 심의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 따르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낙농가수가 적은 특·광역시장은 인접시도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어, 젖소농가가 61곳에 불과한 세종시 역시 다른 광역시의 사례처럼 원유검사 업무를 인접한 광역도로부터 이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손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농약이나 항생제를 검사할 장비가 없다는 제출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관련 장비가 3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금이 누수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이라며 "인력 증원이나 신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며 집행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관리 조직 정비, 요금체계 개선 및 운영시간 통일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리 주체와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른 점과 주차장마다 운영시간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고 "세종시민이 교통 환경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중 3위가 주차 공간 문제" 라면서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주차장 관리 방안으로 ▲관리주체 체계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부서의 정비 ▲단일 또는 2~3개의 요금방식으로 주차요금체계 정비 ▲주차장 운영시간 통일 등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라꽃, 무궁화의 실질적 관리에 힘써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 잡고 세종시가 무궁화 브랜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금택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무궁화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식재된 무궁화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하며 관내 무궁화를 전수 조사해 2~3년 동안 집중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강릉 방동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15년 된 무궁화 나무처럼 우리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 품형이 아름다운 나무 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무로 가꾸어야 한다며 무궁화를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우리 꽃 무궁화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리기 위한 무궁화 박물관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려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나가야 한다" 고 발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전략적인 계획으로 세종시가 대표적인 나라꽃 무궁화 도시로 정착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형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고 주문했다.

이윤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지난 7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우리시의 지역의료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의료체계의 감염병 대응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시기야말로 세종시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의료원 도입으로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해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을 마련하고 ▲공무원 연수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감염병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격리환자의 생활치료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 단위의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 업무 수행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심리치료를 위해 학교 보건교육을 확대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주차난 해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해 주 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며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이 이뤄질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 의원은 많은 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 의원은 "기존에 확보된 나눔주차장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눔주차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목표로 예산 확대 등 노력해야"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1위 수준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에도 여전히 연 평균 200건 이상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시설 100% 완비를 목표로 주택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본부와 읍 면 동 합동으로 면밀한 전체 수요 조사 실시 ▲2022년까지 설치율 100% 달성을 위한 소방시설 재료비 예산 확보 및 설치비 절감 방안 마련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안전도시, 명품도시 세종시를 완성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내년 3월 본격 시행 앞둔 퇴비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비해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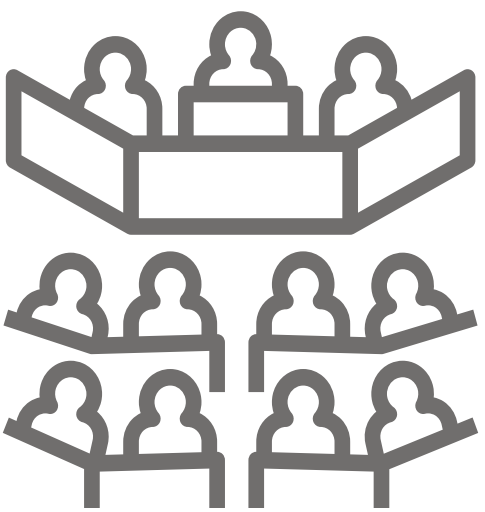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에 따라 강화된 퇴비 관리 기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을 신고한 축산 농가의 경우 12개월, 허가 받은 농가의 경우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 면적 1,500㎡ 미만인 경우 부숙 중기, 1,500㎡ 이상인 경우 부숙 후기 등 퇴비화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차 의원은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을 종합해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된 제도에 부합하는 시행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퇴비사 증축 지원과 함께 퇴비저장 공간을 갖추지 못한 축산 농가와 퇴비공장 간 위탁처리 계약 체결 유도 ▲퇴비 부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분조절제 및 발효미생물 등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비 부숙 촉진 장비 구입 지원 및 임대 장비 확보 등이 정책 대안으로 언급됐다.



/ 시정질문 /

"정책 변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문제 재발 방지 촉구"

주민 이용 시설 계획 변경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강조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변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문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사례는 ▲2-4생활권에 건설 중인 제일 풍경채와 리더스 포레 입주 예정자들 간 갈등 문제 ▲세종시 로컬푸드 3호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치 변경 검토 중 새롬동과 다정동 주민 간 갈등 문제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변경해 인근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 발생 ▲다정동 복컴 용도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을 포함해 총 네 가지다.

임 의원은 제일 풍경채와 리더스 포레 입주 예정자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리더스 포레 측 진출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가 승인해준 결과 제일 풍경채 주 출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라면서 "제일 풍경채 입주민들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리더스 포레 측은 현재 위치로 설계공모에 당선이 되었으니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종시청 주택과와 경찰서, 시공사가 대안으로 각각의 출입구에 회전교차로 2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변경 승인된 계획으로 주변 교통 흐름에 혼잡을 야기한다며 리더스 포레 주민들의 반발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위치 변경 검토와 반다비 빙상장 위치 변경, 다정동 복컴 용도 변경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인근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변경해 집단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 시설의 위치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밀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 며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고 강조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대, 세종시의 역할 점검해야"

세종시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정책 대안 추진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동물 등록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점을 언급하며, 동물 등록의 필요성과 세종시 등록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세종시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증가 및 민원 폭증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시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의원은 목줄 등 안전조치에 대한 단속 상황과 2021년 2월 시행 예정인 맹견 소유주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세종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대비책 마련' 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동물복지 정책과 동물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동물보호 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민들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의 동물복지 정책의 실행과 행정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질의에서 타 시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례를 들며,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기본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세종시 동물보호 정책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중심 과제 등에 대해 답변하고, 타 시·도에 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에티켓 교육과 토론회 등 시가 갈등 중재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세종시 정책 마련에 모두가 공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시정질문 /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통해 공백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주문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동)은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센터 유치와 전문의 확보를 통해 공백 없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응급의료기관은 최근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을 포함해 총 2곳으로 세종시 인구백만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전국 평균인 7.8개소에도 못 미치는 5.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구성 비율이 높은 도시인데도 중증외상환자의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손 의원은 진단했다.

손 의원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응급환자 50명이 타지역으로 재이송되었고, 그 중 90%는 진료과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었다" 며 "이러한 관외 이송 시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꼬집었다.

이에 손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종합병원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규모의 추가 응급의료시설 유치 ▲매년 수립하는 세종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평가지표 개선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의 응급의료시설 신설 유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발언에 대해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좋은 소식" 이라면서 "세종시에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고 주문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적 자립만이 아닌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막힘없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며 "공공의료 역시 자족도시 세종시가 갖춰야 할 기능인 만큼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실현되어 의료 공백이 없는 세종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역설했다.

"누적 매출 천억원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소농가 참여 감소로 본 취지 퇴색"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급 농산물 검수 미흡과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 당부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으로 싱싱장터의 누적 매출은 1,000억원대에 달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운동의 본래 취지와 달리 매년 수십여 지역 영세 농가의 참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전략품목 등 작부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 수가 증가하면 전체 매출 즉, 외형은 커질 수 있지만 한정된 시장 규모에서 개별 농가, 특히 소농가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며 "지금과 같은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면 매출 증대 이면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출범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농산물 가운데 지역 농산물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짧은 유통 과정을 거치는 지역 소농가를 활용해 질 높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인 만큼 낮은 비율의 지역 농산물 납품 실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30개 목표 중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전략 품목 증대를 통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중 평균가를 정해놓고 정책적으로 지역 농산물 납품 비율이 보다 향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면서 "급식비 단가 중 식품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 농산물 납품 단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절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싱싱장터에 등록된 총 농가 수는 954곳에 달하고 있는데 싱싱장터에 1건 이상 납품 농가가 작년 677곳에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613곳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10월) 341농가의 참여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감소세는 대부분 소농가의 참여가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현 체계로 싱싱장터 3, 4호점이 개장할 경우 대농가의 매출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소농가의 입지는 더욱 약화돼 로컬푸드 운동의 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면서 집행부에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 시정질문 /

세종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참여 열린시정" 구현해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세종보 해체 등에서 소통 행정의 중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입지 선정 중에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지 못해 전면 재검토 하는 상황이고 2024년 완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심권에 성공적으로 조성한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등을 소개하며 "친환경종합타운이 도심에 위치하면 운반비용도 줄어들고,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점이 많다" 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기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 말하며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폐기물 수거 노선 자료 구축으로 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등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지난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를 제안한 것을 두고 "세종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 대량 용수 공급 수요, 금강 친수공간 활용, 경관 저해 등 우려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 요구했다. 또한 세종보 해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녹지환경 조성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들만큼이나 시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서 "가로수 관리에서도 강조했지만,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시설 조성부터 감축 정책까지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하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고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 고 요구하며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새해 우직한 소의 기상으로 뚝심 있게 목표 향해 나아가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소의 기상을 이어받아 신축년 한해에도 원하고 뜻하시는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새해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성과로 말하는 의회' 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사회 및 지방의회와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여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국회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만큼 주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의회의 모습으로 세종시민들과 동반자적 신뢰 관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2030년까지 세종시가 완성된 도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행보 하나하나가 앞으로 자족도시 완성과 행정수도 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견제와 균형, 참여와 상생, 희망과 화합의 정치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태 환

의회운영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제65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 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식)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데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기타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2차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본예산 중 의정활동에 대한 소통 강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홍보강화 사업비 8천 3백여만원을 증액했다.

이어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 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시기와 직원 경력 등을 고려 ▲ 전자현수막 도입 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 행정수도 완성 여론 확산을 위한 의회 차원 홍보 강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김원식 위원장은 “안건 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이나 당부사항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 고 요구했다.

2020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처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세종시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에 따른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으로 우리 시의회가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원식 위원장

노종용 부위원장

손인수 위원

이윤희 위원

차성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차 회의 개최…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 결과 총 27개 안건 중 원안 가결 25건, 수정 가결 2건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7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등 동의안 6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27개 안건 중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제3차 회의 개최…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억 9

천만원, '대곡교 수해복구공사' 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9억 398만 3천원(2.52%) 증가한 9,301억 6,918만 9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등 심사…27개 사업 29억 8,916만 2천원 감액, 49개 사업 29억 5,908만원 증액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2021년 예산 규모는 8,757억 5,95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5억 4,359만 4천원(16.89% 증가) 증액 편성됐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이영세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제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등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2020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2차 회의 개최 … 총 26개 안건 처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통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한 결과 총 26건 중 2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그 중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과 도시성장본부 등 전체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일반회계 세출 39개 사업 28억 8,083만원 감액, 27개 사업 28억 8,060만원 증액 수정 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8,201억 7천여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9개 사업에서 28억 8,083만원을 감액하고, 27개 사업에서 28억 8,0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사업비 과다 계상과 산출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도로 유지보수 지원, 지역농산물 홍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지원 등 대규모 사업 추진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경기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꼼꼼히 살폈다" 면서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고 밝혔다.

임채성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

서금택 위원

손현옥 위원

채평석 위원

교육안전위원회

제66회 정례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 '원안 가결' 처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7일과 18일,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를 통해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동의안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원안 가결됐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코로나19로 인한 감액 중점 추경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 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9일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34억 744만 8천원 감액한 1,304억 5,63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일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263억 6,744만 4천원 감액한 8,519억 4,00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수 조정 결과 일반예비비 등 3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 8천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전출 등 4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되었다.

또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60억 5,922만 8천원을 적립

하는 등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다.

세종시교육청 소관 본예산 심사…포스트코로나 대비 언택트 교육 예산 중점 심의

교육안전위원회는 11월 26일과 27일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예비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29억 4,877만 5천원 증가한 8,207억 9,836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 등 13개 사업에서 15억 9,790만 8천원을 감액하고 읍 면지역 기숙형 일반고 지원 등 25개 사업에서 15억 9,790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2021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재해 재난 예방 등 시민 안전 예산 중점 심의

교육안전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30일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안찬영 위원

이순열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교육청 제2회 추경 종합심사

세종시청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된 1조 8,879억원, 교육청 3% 감액된 8,519억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0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과 '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고려해 세종시가 제출한 기정 예산 1조 8,389억 대비 2.7% 증액된 1조 8,87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심사했다.

다만 특별회계 사업 중 이전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일정이 지연된 장군119 안전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754만 6천원은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심의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 사용하는 것)

또한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83억원 대비 3% 감액된 8,519억원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예결위는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등 3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원을 감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 2개 사업에서 3억 6,508만원, 2021년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억 5,922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0억 5,922만원을 증액한 1,820억 3,281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감액 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 성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했으며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추진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 할 것" 을 당부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1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 1조 8,173억원 교육청 8,208억원 규모 본예산안 의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에서 11일까지 6일간 '2021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과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122억원(13.2%) 증가한 총 1조 8,173억원과 329억원(4.2%) 증가한 8,208억원 규모다.

2021년 세종시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등 총 88개 사업에서 86억 4,814만원이 삭감되고, 보건소 소관 지자체 예방접종사업 등 98개 사업에서 86억 4,814만원이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1,552억원(93%) 증가한 2,996억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세종시의 내년 본예산안 중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확대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등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 중 평생교육 학습관 소관 창의융합 교육축제 등 13개 사업에서 14억 7,410만원이 감액되고, 조직예산과 소관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서 10억 2,316만원이 증액됐으며 나머지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됐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보다 27.3% 감소한 1,315억 1,748만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읍 면지역 기숙형 고등학교와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개발, 특수교육 운영 등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손현옥 위원장은 "이번 본예산안 종합 심사 과정에서 재정 투자 목표가 시정 및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지 실현 가능 여부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도 꼼꼼히 살펴봤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 간담회
제5차 간담회 개최…6개월간 공식 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손인수)은 11월 10일 제5차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올해 4월 17일 발족 이후 대전, 광주 등 우수 지자체 현장 방문과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참관인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섯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연구모임은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결과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노선 추가 제안(50% 비율 투입) ▲저상버스 불가능 노선의 원인 분석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기준(최소 1.5m) 제안 ▲신교통수단 등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이날 저상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6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인수 대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회원분들과 참관인,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며 "연구모임이 종료 된 이후에도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우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5차 간담회 개최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 도 농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차성호)은 10월 29일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차성호 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전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임수연 청년 창업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모임 추진 과제인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 이어, 차성호 대표의원 주재로 회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영, 재단, 위탁' 등 운영 주체별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지자체별 농가 농업인 현황 등 환경 분석, 공공급식센터 운영현황 및 전문가 의견, 학교급식 연간 운영비 현황 등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10월 29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유철규)은 10월 29일 제7차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추진했던 주요 연구 과제로는 ▲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 기준 ▲ 공공체육시설 거리 및 용지 유형별 배치 방안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방안 ▲ 세종시 민원 발생 공공체육시설 개선 방안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소통의 과정이었다" 며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가 집행부에서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유철규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는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그 활용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 며 "세종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2020년 2월 17일 발족하여 간담회 총 7차례와 현장방문은 물론,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공급 및 지역사회와 공존 배치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서' 를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주요 안건 처리 목록 (제 3차 본회의)

연번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소관위원회	의결 결과
1	손인수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원안가결
2	차성호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수정가결
3	차성호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4	이재현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수정가결
5	노종용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6	노종용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7	차성호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8	박성수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9	이재현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0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1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2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3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4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5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6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7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 주요안건처리현황 /

연번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소관위원회	의결 결과
18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19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0	시 장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행정복지	원안가결
21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2	시 장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3	시 장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4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5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6	시 장	예정지역 S-1 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	행정복지	원안가결
27	유철규의원 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행정복지	원안가결
28	14명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수정가결
29	채평석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0	임채성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1	임채성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2	손현옥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	수정가결
33	서금택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4	임채성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	서금택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보류
35	채평석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6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7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연번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소관위원회	의결 결과
38	시 장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39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0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1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2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3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4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5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6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7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48	시 장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	수정가결
49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50	시 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51	시 장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52	차성호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안전	수정가결
53	이순열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54	박용희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55	박용희 의원 외 4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56	시 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57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58	교육감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연번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소관위원회	의결 결과
59	박성수의원 외 5명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교육안전	원안가결
60	시 장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교육안전	원안가결
※시청 55건, 교육청 5건				
1	시 장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예산결산	수정가결
2	교육감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수정가결
3	교육감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	수정가결
※예산안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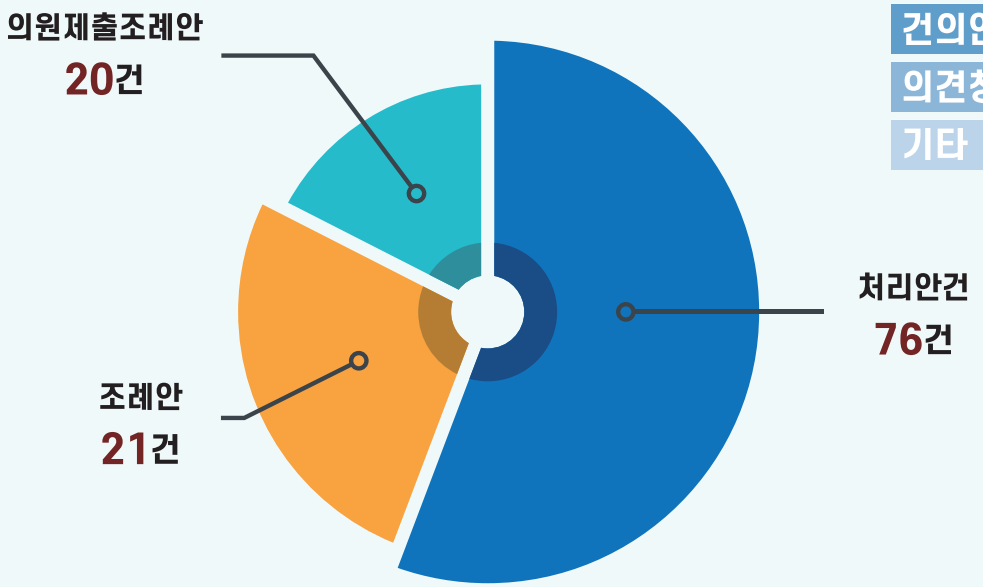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주요 안건 처리 목록 (제 4차 본회의)

연번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소관위원회	의결 결과
1	시장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	원안가결
2	시장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산결산	수정가결
3	시장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	원안가결
4	교육감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수정가결
5	교육감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	원안가결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기금2건				

숫자로 보는 제66회 정례회

▸ 의안 종류별(본회의 통과)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2건



※회기 35일

▸ 소관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산업건설위원회 25건

행정복지위원회 26건

교육안전위원회 9건

입법 정보

- 생활법령 (슬로몬의 선택)
- 주요 입법 동향
- 법령 해석 사례
- 최근 시행 법령
-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솔로몬의 선택】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01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초등학생인 지훈은 같은 반 학생인 준서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준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희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검 사 개인 SNS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은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준서를 지칭한다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프로필을 접한 사람들은 준서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가 희 학교폭력범이 준서라고 딱 찍어서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개인SNS에 내 감정상태나 생각, 의견을 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평 결

정답은 2번. 가희 입니다

학교폭력범이 준서라고 딱 찍어서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개인SNS에 내 감정상태나 생각, 의견을 쓴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 )인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 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반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따라서 가희는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준서를 특정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02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투자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인 "생법조합" 에 가입하며 아파트 중 206동, 2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나투자씨 등이 공급받기로 한 206동, 207동의 신축은 무산됐습니다.

"생법조합" 은 나투자씨 등에게 원래 계약했던 것과 다른 동·호수의 아파트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나투자씨 등은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나투자씨 등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법조합 나투자씨 등과 조합 가입계약을 할 때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각서를 작성했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원래의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죠~!

나투자씨 네. 각서를 작성하기는 했죠. 하지만 생법조합의 귀책사유로 원래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하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조합 측 잘못으로 원래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셔야죠!

*평 결

정답은 1번. 생법조합 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업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 75892 판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아파트의 규모가 1,014세대에 이르러 당초 공급받기로 한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③ 당초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9다259234 판결).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계약 당시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솔로몬의 선택】

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한 아스팔트포장을 새로운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03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JY회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밭주인인 나일번의 허락을 받고 밭 위에 가볍게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나일번은 밭을 이이번에게 팔았고 이이번은 또 신주인에게 밭을 되팔았습니다.

밭을 산 신주인은 아스팔트포장 때문에 밭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며 JY회사에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신주인 새로 산 내 밭 위에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스팔트포장만 걷어내면 밭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깐 당장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세요!

JY회사 우리는 나일번의 허락을 받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밭주인이 이이번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아스팔트포장 중이었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유권이 당신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는 거니깐 당신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나 다름없죠. 우린 아스팔트포장을 제거해줄 수 없어요!

*평 결

정답은 1번. 신주인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이전 밭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팔트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따라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합물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위 판결에서는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팔트를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팔트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따라서, JY회사가 이전 밭주인인 나일번, 이이번의 허락을 받고 아스팔트포장을 했더라도 새로운 밭주인인 신주인이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 달라고 한다면, JY회사는 신주인의 밭에 있는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LAW

【솔로몬의 선택】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04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의사인 윤복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인 홍도를 진찰하고 있는데, 홍도가 윤복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홍도 : 내 친구 중에 득신이가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병원에 올 수가 없대요. 전화로 진찰해주시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검 사

전화 진찰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 윤복

전화 진찰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 결

정답은 1번. 검사 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의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환자와 의사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진찰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동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여 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이 사례는 대면진찰을 한 적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전화 통화만으로 적법한 진단이나 처방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사 윤복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05

출처 – 법제처(생활법령)

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보듬이는 사실혼관계인 엄마·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듬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보듬이 아빠는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보듬아빠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어, 이러한 사항 모두를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만'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자추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 결

정답은 1번. 보듬이 아빠입니다.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사안은,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임을 확인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를 어느 범위까지 보아야 할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따라서 보듬이 아빠는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더라도 위 ① 또는 ②의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 대법원 판결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하급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결정에 의하여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공포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11.17 공포 /'20.11.20 시행/대통령령 제31166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기준을 1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조치 및 그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시행령

('20. 11.24 공포 /'20. 11.27 시행/대통령령 제31189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등에 설치되는 차도·보도·자전거도로로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단지내도로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를 사망사고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 11.24 공포 /'20. 11.24 시행/대통령령 제31172호)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 등의 경우 현재는 범죄피해재산을 환부받을 피해자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환부 청구를 받을 때까지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환부받을 피해자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 종료 후에도 추가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환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 12. 8 공포 /'20. 12. 8 시행/법률 제17602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이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9 8 공포 /'20.12. 8 시행/법률 제17641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그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 무기관의 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20.12. 9 공포 /'20. 12. 9 시행/대통령령 제31248호)

언론매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종전에 일간신문,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 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앞으로는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76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최근 공포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 12. 8 공포 / '21. 6. 9 시행 / 법률 제17598호)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그린산업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 12. 29 공포 / '21.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1290호)

주권 양도 시 발생하는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퍼센트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수단의 체계로 편입시키면서 최고 운행속도와 차체중량에 대하여 정하고 그 외 안전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둘러싼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위한 것임.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여도 전동기가 작동하고 차체중량이 30kg이상으로 불법 개조된 장치를 운행하더라도 현행법에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인원 초과의 경우에도 관련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제153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156조제1호 등).

지방의회법안 (이해식의원 등 26인)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며,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없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저해하는 여러 측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특히,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제4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또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12 23. 까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따른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청약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공고 내용 중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 공고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다양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주택을 영구임대주택에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가구원수별로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 입주대상이 축소되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자 등 실수 요자의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12. 28. 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차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차령 2년 추가, 노선버스 기본차령 1년 추가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1. 1. 5. 까지)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12. 15. 까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1. 1. 6. 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 공급에 따른 전매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회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질 의】 (법제처-20-0378 / 회신일자 2020.11.1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각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각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선정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각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을 적용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함.)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주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모집할 수 있도록(제2항 제3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를 제외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제50조 제57조제1항제1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72조)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제74조) 등을 거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정비사업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상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선정은 정비사업이 착공되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입찰공고를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투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각주: 사업시행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매매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한 자를 말하며(「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를 선정하고(제6조 제9조) 가격협상 및 매매예약 체결 등을 거쳐 임대사업자를 선정(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것은 「주택법」 제54조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그 추진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선정하는 임대사업자를 일반적인 수분양자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각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함.)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착공 이후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야 하는 절차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질 의】

(법제처-20-0477 / 회신일자 2020. 11.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관련)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퇴직 후에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 라 함)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에서 신고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자에 한정하여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에서 공직자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목),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나목) 또는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각주: 다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직자"라고 정의하여 현재 해당 직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9조 등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 등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해당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 수행 관련 부패행위와 중복되지 않는 신고일 가능성이 있는바,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제도가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목적이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상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부패행위를 파악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실제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 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 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 등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정, 1월 1일 시행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 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1월 1일 시행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월 16일 시행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1월 21일 시행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 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 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이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른 자치단체 제개정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시행 2020. 11. 11.]

제안이유 :

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마.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제안이유 :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나.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다.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탁 (안 제7조)

전라남도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원 조례

[시행 2020. 11. 26.]

제안이유 :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라남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발적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사항 (안 제3조)
나. 참여 지원 (안 제5조)
다. 홍보지원 (안 제6조)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0.]

제안이유 :

가.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감염병·화재·사고·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긴급지원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위기가구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10조)
바. 긴급지원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0. 10. 14.]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과 촉진 조례

[시행 2021. 5. 6.]

제안이유 :
강원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 및 재활용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활용 지원 사업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기술개발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생산제품의 구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 2020. 11. 6.]

제안이유 :
충청북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시책과 사업(안 제3조)
나. 충청북도 관광상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제6조)
다. 관광상품 관련 행사(안 제7조)
라. 입상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마. 관광상품의 선정(안 제9조)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제안이유 :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과 군·구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7조 및 제8조)
바.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논평 및 입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 예산 통과! 세종시민과 함께 국회 세종시대 준비해 나가겠다”

12월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27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35만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온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통과는 앞으로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2년간 예산은 편성됐지만 집행하지 못한 20억원과 이번에 확보한 127억원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건립을 기정 사실화한 결정인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검토 중인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이전안을 비롯해 최근 거론된 국회 완전 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국회와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안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행부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논평 및 입장

30여년 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오늘(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는 일부 한계점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는 의회 조직을 자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 지방의회 자치 조직권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 역량과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점도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게 다양화·세분화된 지방 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고, 시민 밀착형 예산 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한목소리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해 나가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논평 및 입장

행정수도추진단, 국회 세종의사당 단계적 이전안 담긴 '균형발전 청사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본예산 통과에 이어 여당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추동력이 될 청사진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

추진단이 국가 균형발전의 청사진으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과 국회 세종시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함께 제안한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 로 조성해 나가는 역사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품질 또한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 는 우원식 추진단장의 말처럼 앞으로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 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과 국회 특위 구성,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민, 국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서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작은 봉사, 큰 기쁨

오 새 리 (세종시 아름동)

남편의 회사에서는 간부 사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도 늘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봉사의 주된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장애인 시설에서 만드는 물건을 여기저기 팔아주는 일이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만든 한과와 찹쌀떡을 주문해 친척집과 이웃집 등에 할당을 줘서 팔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애인 단체를 돕는 일이라면 선뜻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큰 돈은 아니라도 약간 부담 느끼는 사람들도 적잖다.

아예 친한 친구나 친척들에게는 "돈 3만원 없어도 살지?" 라며 확 떠 맡겨버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봉사활동 이라고 하기엔 낯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 주는 일이 정말 큰 보탬이 된다.

시설의 관리자분이야기에 따르면 1개에 1100원씩 소비자에게 팔리는 찹쌀떡의 경우 만드는 쪽에서 남는 이윤은 150원이라 한다. 워낙 재료비가 비싸다 보니 불가피하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겉포장에도 찹쌀과 팥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해 놓는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왜 그런데서 만드는 물건인데 국내산을 안쓰세요?" 라고 묻는 경우도 적잖다. 그럴 때마다 그곳의 어려움과 현실을 말하며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지만 사정 이야기를 듣는 시민들 모두 금세 이해해 주신다.

물론 찹쌀떡은 음식을 만드는 주부 입장에서 봐도 참 맛있고, 크기도 일반 제과점에서 만들어 파는 것 보다 넙데데하니 크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들이 장애인이라서 어디에 가서 차별대우를 받지도 않고, 자신들의 처지와 동료의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또한 그분들이 만드는 물건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터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게 훨씬 값지고 중요한 일이었다.

세종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곳인데 시설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없어서 안타깝다고 한다.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일자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 보았다.

세종시내 모든 장애인분들이 올해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모든 세종시민들이 이분들과 함께 가는 사회분위기였으면 좋겠다.

※ 2021 통권 제29호 「세종의회소식」에 실릴 〈자유기고〉를 보내주세요.

- 대　　상 : 시민
- 기고내용 : 생활 전반의 자유로운 글
- 우　　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 문　　의 : 044.300.7248
- 팩　　스 : 044.300.7249
- 이 메 일 : havnpark@korea.kr

※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내 내외

질병관리청

발행일 2021.1.25.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01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02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0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04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05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